

# 초대와 환대의 정책 '생활인구'

의정단상

신수정  
광주시의원



얼마 전 인구감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왕평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주장이 이목을 끌었다. 인구가 줄어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다는 논리적 접근도 이색적이었다. 뻘뻘한 도심의 교통체증, 보고 싶은 콘서트 티켓 예매에 스트레스받을 일이 없다는 측면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인구가 줄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생산인구' 즉,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통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현재 한국은 7번째 출생아 수가 내리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서도 한국은 2013년부터 매년 꼴찌라고 하니 매우 심각한 문제다. 광주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는 올해 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2곳이 유아를 모집하지 못해 올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일시 휴원이라고 하지만, 공립유치원 학급 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해 1년 동안 휴원한다고 한다.

광주지역 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학년도 추가모집 발생 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시·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광주는 9개 대학에서 1554명이 부족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생활권역 통계분석'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인구는 지난해 323만6000명에서 지속 감소해 오는 2037년에는 305만4000명으로 전망했다. 올해 기준으로 15년 후에는 약 18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실로 답담하다.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생활인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등록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즉,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가 아닌 생활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뜻한다.

예컨대 담양에 주 거주지를 두고, 직장이나 있는 광주에 부 거주지를 두면서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담양에서 시간을 보내는 개념이다. 이를 '복수주소제'라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두 개의 주소를 신고한 사람은 두 지역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양 지역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처음으로 생활인

구 개념을 도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낮은 영역인 만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활인구의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과 측정 방식이 필요하다. 즉, 체류 인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방식의 문제가 관건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필자는 광주에 필요한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을 연구 중이다. 생활인구가 지방소멸 대응방안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광주부터 노력해보자는 취지다. 광주·전남 상생의 차원에서 마땅하지 않다. 전남지역에 방문하는 체류 인구가 광주와 지속해서 관계를 맺고, 이주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토론회 등을 통해 모색해 볼 계획이다.

'초대'라는 말은 청함의 의미이고, 초대하는 이는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기 위한 '환대'가 필요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고, 일할 인구가 줄어드는 광주는 '생활인구'라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 '초대'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와 '환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국토 면적 10%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상황에서 '생활인구' 도입은 매우 유의미하다. 지자체들이 정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을 최소화하고, 지역간 인적 교류와 연계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생활인구' 정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 社說

### 철부도선 차량 승선 안전장치 강화해야

#### 완도 차량 바다 추락 3명 사망

지난 18일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선착장에서 차량을 여객선에 승선시키는 과정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희생자는 70대 중반의 운전자와 부인, 30대 손녀 등 일가족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완도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께 당목항 선착장에서 완도 금일도로 가는 철부도선(차량과 화물을 나르는 선박)에 차량을 승선하는 도중, 사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바다에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사고 발생 40여분 만에 수심 7m 아래 차량에서 이들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이들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CCTV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살펴볼 때 사고 발생 전후에서 안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포착됐다. CCTV영상을 보면 여객선이 아닌 바다 방향으로 후진하던 사고 차량을 발견한 현장 안내 요원이 급하게 멈추라

고 손짓을 했지만 차량의 바다 추락을 막지 못했다. 선착장은 바다쪽으로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차량이 진입하면 제동이 불가능한 구조인 때문이었다. 이런 시설물 구조와 철부도선 차량 승선이 후진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운전 미숙 차량에 대비해 안내 요원을 집중 배치하거나 차량 추락 방지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이날 한 명의 안전요원이 승선 차량과 대기 차량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락위험표지판 이외의 실제 차량 추락 방지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골든타임내 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안전 체계 미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고 원인이 운전 미숙이든,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든, 안전 시설 미비든 사고는 늘 헛점을 파고들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1차적인 책무인만큼 이번 사고 원인을 규명해 빈틈없는 여객선 승선 차량 안전 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노력

#### '외력 충돌' 미반영 설명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발표한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에 '외력 충돌' 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참위의 보고서는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가 세월호 참사 이후 8년 만에 펴낸 최초의 종합보고서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 보고서가 집필 과정에서 여러 증거가 채택되지 못한 채 최종 발표됐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8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이 주최한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회에 참가한 사참위 조사팀은 선체조사위원회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던 유압조절장치 고착 등을 조사했지만 침몰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사고 당시 굉음과 함께 배가 급속도로 기울었다는 증언에 따라 소리의 출처를 탐색한 결과에서도 외부 물체에 의해 가해진 힘이 원인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증거에도 사참위는 '세월호가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

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국의 조사 내용을 두고 전원위원회가 '외력 가능성 낮추라'고 지시하면서 내부적으로 다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참사 보고서 집필에 선조위 내인설 보고서 책임자를 선임하고, 최종보고서 작성에 조사관을 배제하는 부당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박병우 전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의 설명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올해로 9년이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국민과 유가족의 애타는 요구에 사참위가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종발표 직전까지 사참위가 진상규명국의 조사 내용을 무시했다는 것은 신뢰성에 치명적인 일이다. 항적 정보나 CCTV 조작 의혹 등 보고서에 채택되지 않은 증거도 상당하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참사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고쳐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앞으로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조사관의 이야기에 9년을 맞는 세월호의 아픔이 그대로 담겨있다.



##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 서석대



겨울 끝자락부터 물기 뺀 바람이 불고 뱃나무 가지에 붉은 색이 감돌더니, 경칩 지나자 이내 봄의 신열이 대지를 감쌌다.

마당에 조르라니 심은 수선화는 이미 노란 화관을 썼고, 작약은 불그레한 매니큐어를 칠한 아가씨 손톱같은 새순을 내밀었다.

순창에서 가져다 심은 자두나무, 살구나무 잔가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꽃망울이 병글져 금세라도 폭죽을 터뜨릴 듯 수련거린다. 언덕배기 개나리도, 산허리에 실안개처럼 둘러진 산수유도 별, 나비 유혹하느라 교태를 부린다.

그렇게 또 한번의 봄이 왔다. 별이 좋은 봄날, 오일장에서 사 온 파를 다듬을 요량으로 노모가 마당에 자리를 폈다. 몇 번인가 먹이를 줬더니 제 집인양 드나드는 길고양이도 곁에 앉았다. 뒀안 뒷밭에 옮긴 상추 모종에 웃거름을 주고 돌아서는데, 노모도, 고양이도 얌전한 표정에 겨운지 금세 눈을 감고 있다. 시골살이 이때쯤 아늑한 봄날 풍경이다.

노모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가만히 틀어 놓는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웃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기슴 아리는 봄날, 한 맺힌 정서를 그려낸 노랫말에 백설

희의 낭랑한 목소리로 심금을 울렸던 '봄날은 간다'이다.

국민 애창곡 '봄날은 간다'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북한산에서'처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노랫말이다.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 부른 가수도 여럿 있다.

1953년 백설희가 선보인 이 곡은 한영애, 나훈아, 조용필, 최백호, 장사익 등 절창들이 각기 다른 음색으로 다시 불렀다.

제목은 같지만 다른 노래도 있다. 김윤아가 부른 '봄날은 간다'이다. '봄날은 가네 무심히도/ 꽃잎은 지네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들/.../ 그건 아마 사람도/ 피고

### 봄앓이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노래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대사 한 마디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노랫말에 취한 탓일까.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다보니 찬연한 봄날임에도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와 영절거리게 된다. 별다른 이유없이 봄에 자주 몸이 마르는 슬픔을 춘수(春瘦)라고 하던가. 올해도 봄앓이가 어김없이 찾아온 모양이다.

눈을 들어 텅빈 하늘을 보니 무단히 어릴 적 동무들이 보고 싶다. 그리운 옛사람들도 만나고 싶다. 이 봄, 저들보다 처럼 한번쯤 내생각 하려는가. 봄바람이 전해준 그리움이 깊어가는 날이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